



편집자주 : 본고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주간 통상정보」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1. EC, 한국産 반도체 반덤핑조사 개시

EC 집행위는 3월 6일자 관보를 통하여 한국産 반도체(DRAM)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품목은 DRAM(CN Code 8542 1141, 1145), Wafers(8542 1110), Disk(8542 1130), Modules(8473 3000, 8548 0000)이며 제조측은 유럽전자부품제조업자협회(EECA : 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로 밝혀졌다.

제조측은 한국産 제품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EC에 수출되고 있고 수출물량도 '88년에는 30만개(1 M-DRAM기준)에서 '89년에는 400만개로 대폭 증가하여 동기기간중의 EC시장 점유율이 1.43%에서 7.55%로 증대되는 등 역내업계에 대한 피해(재고누중, 가격인하압력, 금융압박, 투자감소 및 실업)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9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산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Price Undertaking)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EC의 반덤핑조사 가능성은 작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이는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EC의 반덤핑조사 과정('87.2~'90.1)에서 일본의 후지쓰(Fujitsu)社가自社 제품의 덤핑무혐의를 변호하는 자료로서 한국産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EC는 일본産 반도체에 대하여 분기별

로 기주가격(Reference Price)을 설정, 가격규제를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반도체제품의 對EC수출은 '89년 354,480천불, '90년 375,153천불로 전체수출의 8.25%('90년 기준)을 점하고 있다.

2. 미·일 반도체협정 연장협상 개시

미국과 일본은 오는 7월말로 종료되는 美·日 반도체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2월 14일 시작하였다.

美·日 반도체 연장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반면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협정의 골격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1986년 美·日 반도체협정 체결당시 일본이 부속합의각서에서 협정 종료시까지 미국의 對日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美·日 반도체협정 연장시 對日시장점유율 목표를 20%로 다시 설정, 1993년말까지 지키도록 일본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86년 협정체결시 합의한 20%는 하나의 기준일뿐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미국의 對日반도체 시장점유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무역제재조치의 폐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레이건대통령은 1987년 4월 일본의 반도체덤핑 방지, 시장점유율 보장 등 반도체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3억불 상당의 일본産 對美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그후 제3국을 통한 덤핑수출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1억 3,500만불 상당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한 나머지 1억 6,500만불 상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美·日 반도체협정의 연장문제가 또다시 주요한 통상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통상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협정이 연장되도록美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Max Baucus 상원 국제무역 소위원장(民, 몬타나)은 2월 13일 Hills USTR에게 서신을 보내 협정연장을 1991년 美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도록 촉구하였으며, 같은날 Bob Packwood 상원의원(共, 오레곤)도 Hills 등 행정부 주요인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협정의 연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하원에서도 Bill Archer 의원(共, 텍사스)이 Hills USTR, Mosbacher 상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美·日 반도체협정의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USTR은 불공정관행국으로 파악된 국가에 대해 GATT 정부조달 협정의 준수 또는 그 차별적 관행의 폐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례보고서가 발표된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USTR은 어느 국가도 불공정관행국가로 규정하지 않았었다.

3. 美 USTR, 한국 및 EC와의 통신기기협상 1년연장 발표

USTR은 1989년 2월 통신기기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및 EC와의 협상을 또다시 1년간 연장한다고 2월 22일 발표하였다. USTR은 협상연장 이유로 최근 쌍무협상이 상당한 진전

을 보았으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UR협상이 개개됨으로써 쌍무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현안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협상의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韓·美 양국은 지난 2월 4일~6일 韓美통신기기협상을 개최하였는데 美측은 이 협상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협상관계자들은 국내전화를 통신위성에 연결하는 국제부가가치 통신망 개방약속에 특히 만족을 표명하고 있으며 쌍무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통신기기의 정부구매와 통신기기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에 관한 문제는 UR협상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협상임 1년 더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근검절약 운동과 지난 12월 브뤼셀 통상장관회담에서의 농산물시장개방 반대 등으로 악화되어온 韓美 통상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통상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USTR은 1988년 종합무역법 및 통신기기조항에 의거 1989년 2월 21일 EC의 통신기기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통신기기 시장개방협상은 1년씩 2회(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2월 4~6일의 韓美통신기기 협상時 한국측이 제시한 시장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자제품의 관세인하 및 무관세
 - 관세 : 10~13%, 방위세 : 30%(현재)
- 외국사업자의 국내 DB, DP 사업자유화 : 91. 7. 1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국제서비스 참여
 - 국내기업(외자 50% 이하) : 91. 7. 1
 - 외자 50% 이상의 외국기업 : 94. 1. 1
- 국제 VAN, 단순전송, 단순 회선재판매사업 : 국내기업과 합작(50%) 기능
 - 국내사업자 : 91. 7. 1
 - 외국사업자 : 94. 1. 1

4. 美 반도체업계, 對日시장점유율 25% 요구

오는 7월말로 종료하는 美·日 반도체협정의 연장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美반도체 업계가 향후 5년내 미국의 對日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對日시장점유율 설정문제와 관련한 美·日 양국의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美·日 반도체 연장협상과 관련, 美반도체협회의 Wilfred Corrigan회장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개최, 1986년 협정체결당시 일본이 보장한 시장점유율 20%는 2년내에 달성되어야 하고 앞으로 양국이 체결할 연장협정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對日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1990년대 말까지 미국은 일본시장점유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와관련 일본은 1986년 협정체결당시 설정한 시장점유율 20%도 하나의 기준이지 약속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보장 약속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美·日 반도체협상연장협정을 체결하는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美반도체협회는 對日시장점유율 보장목표 확대와 관련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USTR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던 1차 연장협상에서도 1986년 합의한 20% 시장점유율 확보문제만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對日시장점유율은 13.5%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을 제외한 세계 시장점유율은 57%에 이르고 있다.

5. 美, UR협상 재개로 통상정책에 관한 논쟁가열 예상

GATT UR협상의 재개로 보호주의자들과 자

유무역주의자들간에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月末 주요협상참가국들이 UR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2월 브뤼셀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과 EC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UR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였으며, 협상재개 합의에 따라 美행정부는 5월말로 종료되는 Fasat-Track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UR협상과 美·멕시코 자유무역협상의 추진에 없어서는 안될 Fasat-Track의 연장과 관련, 보호무역주의자들과 자유무역주의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美노조,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 자유무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단체 및 산업은 UR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값싼 제품의 수입이 범람하여 미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고 고용과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첫 심의단계인 Fast-Track 연장단계에서 협정의 체결을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반면 다국적기업, 유통업체, 일부 농산물단체 등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받게 될 단체들은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의 확대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UR협상과 美·멕시코 자유무역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협상에 관한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美의회의 Fast-Track 연장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ax Baucus 상원무역소위 위원장은 Fast-Track의 연장에 대해 40여명이 지지를, 35명에서 40여명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20명에서 25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원의 Fast-Track 연장반대세력은 지난해 반대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는 Earnest Hollings상업위원장(民,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의해 추도되고 있다.

美의회내에서 同절차연장에 관한 반대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행정부는 Fast-Track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요청하였다가 추후 1년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6. 美상무성, 한국産 컬러TV 브라운관 반덤핑 우회수출 무혐의 최종판정

美상무성은 3월 1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미국으로부터 컬러TV 브라운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4개국이 기존의 반덤핑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컬러TV 브라운관을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에서 TV완제품으로 조립 생산한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고 있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우회수출 혐의가 없다고 최종판정하였다. 이로써 작년 8월 15일 미국 노조단체들의 제소로 시작되었던 컬러TV 브라운관에 대한 반덤핑 우회수출 조사는 종결되었다.

이에 앞서 상무성은 지난 12월 19일 예비판정에서도 컬러TV와 컬러TV 브라운관이 同種物品이 아니며, 컬러TV 브라운관을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조립·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우회수출의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週刊通商情報 第7卷 第50號 “焦點”).

덤핑우회수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1930년 관세법 781조(88종합무역법에서 수정)에 의거,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물품과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물품이 동종물품이며, 제3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週刊通商情報 第7卷 第35號 “焦點”).

이에 따라 컬러TV 브라운관 우회수출규제를 상무성에 제소했던 5개 노조단체연합회인 COMPACT(Committee to Preserve American Television)는 상무성에 반박자료를 제출, 예비판정에서 컬러TV 브라운관 가액(Value) 계산과 동종물품에 대한 결정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무성에 의해 기각되었다.

상무성의 반덤핑 우회수출 무혐의 최종판정

은 멕시코 현지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컬러TV 수출에는 물론 향후 반덤핑·우회수출규제와 관련한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美·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으로 美산업 공동화 우려증대

북미자유무역지대 추진과 관련한 美하원의 첫번째 공청회에서도 상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내 환경규제 미비 및 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될 美산업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Joe Kolter(民, 펜실바니아) 하원의원은 2월 20일 하원세입위의 공청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보건, 안전, 노동 및 美·멕시코 간의 임금격차 문제를 논의치 않을 경우, 현행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對멕시코 기업이전 사태가 속출, 결국은 美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낳게 될것이라 경고했다.

Dick Schulze 하원의원(共, 펜실바니아)도 美·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은 미국내 덤핑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로의 우회수출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충분한 세이프가드(safeguards)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美·멕시코간 FTA에도 반대한다고 명백히 했다. 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원예부문과 관련, Bill Thomas 하원의원(共, 캘리포니아)은 美원에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FTA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은 FTA 관련 현안에 환경, 노동권 및 마약문제들이 포함하도록 재차 촉구했는데, 이에대해 Hills USTR은 현재 미국 및 멕시코 양국정부가 FTA안건을 두고 깊이 논의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FTA내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협정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보호 비용 및 임금격차를 이용, 멕시코지역으로의 대규모 기업 이전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FTA로 인해 “양국 모두이익(win-win)”을 얻게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했다.

Hills USTR은 실업의 급증을 우려하는 일단의 시각을 일축,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3국의 성장 및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 낙관했다.

한 확신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가 진작되어 가까운 장래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Greenspan총재는 소비의 진작을 나타내는 일례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자동차판매점과 부동산회사에 고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그는 美경제성장의 好材로서 終戰이외의 유가하락, 이자율인하, 수출의 지속적 성장 등을 지적하였는데 美중앙은행은 지난 10월말이래 단기금리를 1.75포인트 인하, Federal Fund Rate를 8%에서 6.25%로 낮추었다.

Greenspan총재는 이와같이 중동전의 終戰으로 미국의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경제를 괴롭혀온 난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였다.

Greenspan총재는 경기회복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시중자금난의 경색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고 자금을 방출하여도 시중민간은행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조차 대출을 기피하는데 기인하며 이로써 미국의 기업들은 높은 이자의 대체자금을 찾아야만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업용 건축의 파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Greenspan총재의 이날 증언내용은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짧고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전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으나, 終戰후 중앙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

전망에 관한 입장을 공개하였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 美, 올해 전자산업 수출둔화 예상

금년중 美전자산업은 유럽 및 일본경제의 성장감소추세로 인해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美산업분석가들은 지난해 대폭적인 호전을 보인 美전자산업의 對外무역수지가 금년에는 주요수출시장인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성장세 둔화로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美전자산업의 수출실적이 총 728억달러로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무역적자는 89년의 134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50%이상 축소되었다.

지난해 미국의 전자제품 총수입액은 789억달러를 기록했었다.

피터 맥크로스키 美전자공업협회(EIA) 회장은 지난해 美전자산업부문의 호조로 이 부문에서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었다고 밝혔다. 맥크로스키회장은 그러나 금년의 경우 유럽과 일본경제의 성장감소추세로 인해 美전자산업의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거스 리서치사의 웬디 애브러모워츠연구원도 美전자회사들의 금년도 수출신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쉬어슨 레만 브라더즈社의 에드 화이트연구원은 금년중 일본경제가 다소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제품 수요는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美전자제품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 및 태평양연안국들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반도체생산설비, 전자장비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美중소기업들도 이 지역에서의

발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화 환율 역시 美전자제품 수출전망에 또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맥클로스키 EIA 회장은 이와 관련, 美전자산업이 최근 수개월간 달러貨 약세의 혜택을 봤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전자제품수출은 장기계약베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貨환율 변화요인이 전자제품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기간은 농산물 등 여타 수출품의 경우보다 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9. 日·美반도체협정 연장협상, 난항 예상

금년 7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日·美반도체협정의 연장을 앞두고 외국産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양국간의 통계차이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日통산성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4/4분기중 일본시장의 외국産 반도체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3/4분기에 비해 1.0% 상승한 19.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반도체통계(WSTS)에 의하면 0.1% 상승한 13.2%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측이 국내 반도체 소비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구입액인 반면 WSTS는 주요 반도체메이커의 출하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IBM을 비롯한 일부 반도체메이커의 실적이 WSTS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6년 日·美반도체협정 체결당시 양국은 非공개부속문서로 외국産 반도체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때 통계산출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금년 7월 개최예정인 반도체협정 연장협상에서는 양측이 서로 다른 통계수치(일본 : 19%, 미국 : 13%)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10. Daschle 상원의원, 301조 확대법안 제출

Tom Daschle 상원의원(民, 사우스다코다)은 3월 13일 301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법안(S650)을 제출하였다.

Daschle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해 미국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의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는 예방조치로서 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301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Daschle 상원의원이 301조 확대법안을 제안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캐나다가 계획하고 있는 질소비료공장의 건설이 미국시장에 줄 피해를 사저나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는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대규모 질소비료 공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장이 건설될 경우 캐나다 농민들이 값싼 비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美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同법안에는 밀재배협회, 농업협동조합, 축산협회, 정미협회 등 농민단체들과 질소비료생산 특별위원회, 자연원유생산협회 등 일부 화학업계 등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Jesse Helms 상원의원(共, 노스캐롤라이나) 등 16명의 농업지역출신 상원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